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농업위원회 산하 작업반회의 결과보고

- 2013 OECD 농정시장작업반(61차 APM) 및 농업무역합동작업반(70차 JWPAT) 회의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송주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온누리 사무관

3. 출장일정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11월 18일(월)	인천 → 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11월 19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2박 2일
11월 20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3박 3일
11월 21일(목)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귀국	4박 4일
11월 22일(금)	OECD Conference Centre	JWPAT 회의참석, 귀국	4박 5일
11월 23일(토)	파리 → 인천	귀국	4박 6일

I. 회의명 : 제61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3.11.19-21, OECD 본부 회의장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온누리 사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V. 핵심요지

-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의 무역시장효과’에서 식품 감모나 쓰레기 절감을 가격과 수량을 통해 산출이 가능하며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FAO 추정치에 대한 검토 포함)이며 식품 감모나 쓰레기 절감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파급경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예정임.
- 2014년 농업전망 보고서 구성은 올해와 유사하되 총괄 챕터에서 품목 챕터와 중복된 기술을 줄여 분량을 축소하고 시나리오 개수도 조정할 예정이며 특별주제 대상인 인도의 협조를 받아 인도의 농업전망을 분석할 예정임.
- 2014년 농정평가보고서는 통계 부분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나 보고서의 국가별 정책 변화 소개에 대한 구성의 변화는 사무국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 회원국이 다수 반대하여 차후에 논의될 예정임.
- ‘식품체인에서의 식품감모’ 보고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공개결정을 지지하며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하고 회원국들에게 공개한 후에 공개결정할 예정임.

VI. 상세내용

1. 가축질병 회의

- 사무국은 세계 각국 정부는 지속해서 가축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OIE, WHO, FAO, WTO 등)도 국제적 공조와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지침 및 관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가축 질

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물건강과 경제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며 2013년 6월에 개최된 OECD 가축질병회의에서 경제학과 동물건강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축질병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지식을 나누고 상호이해를 증진했음을 설명함

2.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적 접근 : 가축 질병

- 사무국은 2013년 6월 3-4에 열린 OECD 국제회의 "가축 질병 정책 : 축산학과 경제학 사이의 교량 구축"에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여 가축질병과 관련된 경험을 교환하고 분석하였고 OECD는 다양한 질병과 통제 수단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좀 더 비용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축질병 및 통제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IIE WAHID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 정책적, 경제적 정보를 추가하여 다양한 질병과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책대응, 경제적 영향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시범적 데이터베이스와 방법론적 체계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함
 - 1계층은 역학정보, 2계층은 정책정보, 3계층은 질병이 사회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하여 제안함.
 - 일본과 영국의 구제역과 광우병에 대한 사례분석이 포함될 것이나, 이 외에도 연구에 포함될 국가와 질병에 대해 조사와 자료의 내용 및 범위, 수집 방법 및 분류, 경제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연구에 대해 지지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영국: 영국의 광우병과 FMD 사례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가장 발병이 많고 중요도가 높은 질병인 광우병, FMD,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미국: 세 가지 계층의 자료와 변수에 대한 수집이 관건(IIE 기준 따르지 않은 국가 존재, 자료의 지속적 획득과 국가간 구별이 어려움)이며 가축질병과 대응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 독일: 분석대상 질병과 분석방법에 대한 선택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작업 진행이 가능하며 전염병과 풍토병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함.
 - 캐나다: IIE WAHID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된 1계층의 자료와 달리 2계층의 자료는 회원국이나 개도국의 대응정책 수행, 정보에 대한 인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는 각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광우병, FMD, 조류독감이 중요함.

- 네덜란드: 질병마다 차별적인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정책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전략적인 정책수단의 선택(strategic option)이 필요함
- 프랑스: 광우병, FMD, 조류독감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필요. 개도국 풍토병에 대한 조사·분석도 중요하지만 후속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EU: 2계층의 정책정보 수집이 관건. EU의 관련 자료 제공 가능하며 가축질병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가축질병 하에서 국제교역의 비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FTA 관련 규정도 연구도 필요하고 개도국을 포함하여 FMD와 BSE가 분석대상으로 적절함(풍토병은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호주: 개도국 풍토병 중요하지만, 질병 종류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보(자료) 간극 존재하므로 사용가능한 자료를 활용해 계획서에 제안된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분석대상 질병과 국가를 확대해 가는 접근이 바람직함.
- 일본: 사례조사에 포함되어 감사하고 본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개도국을 포함한 FMD로 연구범위를 좁혀(분석대상 질병을 한정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르웨이: 2계층의 정책정보 수집이 관건이며 주요 질병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분석에 집중하고 나중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OIE: 1계층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할 것이며 OIE의 가축질병 관련 정보는 회원국의 정보공개 동의 하에 제공되며, 주요 내용은 가축질병이 가축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축산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임(경제 관련 자료는 없음). FMD는 빠른 전염성을 가진 위험한 가축질병으로 개도국과 빈곤국에서 상시 발병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함.

- 사무국은 광우병, FMD, 조류독감, 돼지열병을 분석대상 질병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의 관심 가축질병과 사례조사 참여에 대한 문의를 완료하고 최종 결정) 이들 질병 관련 국가별 자료 구축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함. 2계층의 정책정보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EU의 관련 데이터베이스(PBS 시스템)에 흥미. 각국의 서면검토의견을 취합·반영(12월 6일까지)하여 내년 5월 APM에서 경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

3. 항생제에 대한 내성: 축산분야 항생제 이용

- 사무국은 스웨덴의 지원 하에서 축산분야의 항균제(antimicrobials)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과 인식의 차이, 후속 연구주제 등을 제시함.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본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분야의 후속 연구(작업)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

-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를 다루는 것임. 축산분야에서 항생제는 주로 치료, 예방, 성장촉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현재 구세대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비용절감 차원은 아님) 항생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현재까지 충분한 근거가 없지만 개연성은 염두해 두어야 함.

○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스웨덴: 스웨덴이 주도(펀드제공)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환영하며 항생제 문제는 모든 정부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이고 항생제 사용이 적으면 부정적인 영향도 적을 것으로 인식됨. 비용편익분석(CB)이 중요하며 EU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감독, 세금부과, 예방조치 등 국가별 대응정책(관리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들 대응정책별로 비용편익분석 수행이 필요함.
- 미국: 본 연구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의 선행연구가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산업계가 항생제 이용 관련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음(인센티브 부재).
- 캐나다: 항생제는 육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가축에 잔류. 인간 삶(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 EC: 항생제 관련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현재 EC에서도 항생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EC와 WHO가 주관하여 12월에 관련 컨퍼런스 개최). 보고서에는 예방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항생제 이용이 교역,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접근 촉구함(OECD는 위험관리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프랑스: 축산분야 생산이나 소비 관련 미시적인 접근(항생제 이용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보완될 필요. 항생제 이슈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역량 배양(특히 교육이나 통제 등 예방적인 활동)이 중요하며 예방 등 정책대안별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
- 뉴질랜드: 항생제 이용의 공간적(지리적) 분포에 관심. 가축질병 부담감소, 빈곤완화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 중요함
- 네덜란드: 비용편익분석과 총괄적인 접근방식 지지. 인간의 건강(삶)에 미치는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 추가되어야 함
- 노르웨이: 정책수단에 집중해야 하며(예방적 조치가 사후적인 대응보다 더 바람직한 수단임) 항생제의 적합한 영농활용(best practice)이나 최적 이용(optimal use)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해 주기를 기대함
- IE: 항생제와 관련해 편익보다는 위험에 대한 논의가 많고 국가마다 항생제 이용에 대한 견해가 다르므로 OECD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

○ 사무국은 EU의 관련 정보와 선행연구 활용해 자료수집과 분석 보강할 계획(축종별, 항균제별, 농가규모별 자료, 지리적 분포, 가축 건강, 예방조치, 외부효과 등)이며 회원국들

의 관련 정보 제공과 후속연구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 요청함. 수정된 보고서가 3월/5월 APM에 제출될 것이며 이후 OECD 사무총장 책임 하에 컨설턴트 보고서로 공표 예정임. 학제간 연계 측면에서 건강위원회(Health Committee) 사무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집중하고 심층연구와 자발적 자금지원 등은 다음 3월/5월 APM에서 추후 논의할 것임.

4. 2014 농업전망 보고서 계획

- 사무국은 내년 농업전망 보고서의 구성은 올해와 유사하되 총괄 부분의 분량은 축소할 예정임을 설명함
 - 요약(2page), 전망 총괄(20~25page), 특별주제, 8개 주요 품목별 전망
 - 특별주제에서는 “인도의 농업”을 다룰 예정
 - 품목수급과 시장변동성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적 분석(stochastic analysis)을 통한 시나리오별 전망도 올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총괄 부분과 품목별 전망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임(다만, 시나리오 개수는 축소될 것임)
 - 농업전망 보고서의 1차 초안(특별주제 포함)은 내년 3월의 품목시장 그룹 미팅에 제출되어 논의될 예정(베이스라인 전망과 중기 추세 등)이며, 보완된 보고서는 5월 APM에 제출되어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취합한 다음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최종보고서가 공개될 예정(6월 25일)
-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캐나다: 특별주제에 인도 선정을 지지하며 확률적 접근을 통한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박스가 추가되어야 함
 - EU: 전망작업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올해 중국과 내년 인도를 특별주제로 선정한 것을 환영함. 베이스라인 전망을 중심으로 하되 시나리오 분석도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바이오연료 비율 등) 시나리오 분석의 핵심인 가정 설정에서 품목시장 그룹이 중심이 되어야 함(품목시장 그룹의 역할이 중요. 즉, 그룹 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정 설정이나 시나리오 구성 등에 대한 설문 가능. 위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영국: 시나리오 분석은 베이스라인 전망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독일: 총괄 챕터가 핵심적이며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배경, 가정, 분석방법 등)
 - 뉴질랜드: 사무국의 제안한 수정에 반대하며 전망작업은 OECD/FAO 공동연구로써 높은 국제적 공신력과 파급영향을 지니고 있음. 인도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 질문.

- 프랑스: 특별주제에 인도 선정을 지지하며 확률적 접근을 통한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미국: 전망작업에 신규 국가 포함을 환영하며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앞당겨 하면 시간 제약이 완화될 수 있음.
 - 호주: 시나리오 분석 유지를 지지하고 주요 정책/요인별 영향을 부각시켜 제시하는 박스도 중요함.
- 사무국은 보고서 구성은 올해와 유사하되 총괄 챕터에서 품목 챕터와 중복된 기술을 줄여 분량을 축소하고 시나리오 개수도 조정할 예정임을 설명. 특별주제 대상인 인도의 협조는 불투명하지만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그러나 플랜B는 존재하지 않음)함을 설명. 바이오연료 비율과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분석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2페이지 가량의 박스 예상, 3월 APM에서 논의). 시나리오 배경과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독일)이나, 시나리오 가정을 품목시장 그룹에서 결정(EC)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시나리오 확대는 다른 관련 연구나 회의에 유용할 것임(작년에도 12~13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가 일부 삭제함). 그러나 베이스라인 프로젝션이 품목시장 그룹에서 5월경에 확정되어야 이후 시나리오 분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전망보고서의 공표 시기가 제약이 됨). 대안으로 전망보고서와 분리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내용을 별도의 보고서로 출판(웹사이트 공개)할 수도 있을 것임.

5. 중국 식품감모 및 식품쓰레기

- 사무국은 본 컨설팅 보고서는 최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국의 식품감모 및 쓰레기 발생 현황, 식품체인별 발생 현황, 그리고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사례 연구임을 설명.
- 식품체인별 식품감소 및 쓰레기양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도 불완전함. 중국 식품쓰레기에 관한 공식통계는 거의 없어, 이 보고서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설문조사자료, 선행연구 자료, 전문가 의견조사, 민간기관 자료 등임. 한편,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량도 쌀, 밀, 수수 등의 주곡에 한정됨
 - 모든 종류의 농산물의 수확 후 손실은 대부분 저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한 생산규모와 빈약한 인프라구조 때문임. 곡물의 경우, 5.7-8.6%, 육류 2.5~3.7%, 신선식품 10-15% 등의 손실이 저장과정에서 발생
 - 지난 수십년간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인프라 향상 등으로 수확후 식품감모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소득향상과 도시화 진전 등으로 소비단계 식품쓰레기는 증가 추세
 - 소비단계의 식품쓰레기 대부분은 가정이 아닌 출장서비스(catering)과 외식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쓰레기 규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은 대부분 일반쓰레기 또는 도시폐기물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식품감모 및 쓰레기를 한정하여 독립적으로 다루는 제도와 법은 없음. 소수의 관련 정책도 수확 후 식품감모, 특히 저장단계 손실을 다루고 있으며, 소비단계 식품쓰레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음. 식품쓰레기 관리는 대부분 지방정부 또는 도시의 책임 하에 있음. 정부도 식품쓰레기 감량과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 부처가 각 부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식품쓰레기 수집과 운반은 주택부와 도농발전부가 담당하고 처리는 환경부에서 수행
- 회원국들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중국의 식품 감모 및 쓰레기 실태와 관리방안을 잘 정리한 보고서로 평가함
- 일부 회원국은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벨기에: 중국에서 외식업체의 식품쓰레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나 누락된 사안(프랑스: 와인)과 서술 상의 불일치(EU) 등을 지적
- 회원국들은 검토의견을 반영한 다음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컨설턴트 보고서로 공표하는 것을 찬성

6. 식품체인에서의 식품감모 - 공개결정

- 2010년 OECD 농업장관회의에서 사무국에 식품체인별 식품감모 및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였고 2011년에는 OECD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식품 공급을 증가시키고 자원 및 기후의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식품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많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또한 식품감모 및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였음.
- 2012-13년 OECD의 식품체인별 식품감모 및 쓰레기 의제 관련 주요 작업결과인 본고서는 각국의 이용 가능한 식품쓰레기 통계 수집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식품쓰레기 관련 정책 정보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식품쓰레기 관련 용어와 유형에 관한 논의와 회원국의 이용가능한 자료(식품 쓰레기 관련 31개국의 3,300여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법제도 등을 정리하여 제시
-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는 공개결정을 지지하였고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스위스: 국가별 자료의 추정치, 범위, 단위 등의 차이가 존재하며 가구단위 통계 정확치 않음.
 - 캐나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구축한 쓰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키는 계획지지
 - 독일: 가공 단계에서 감모를 줄여 식품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상쇄 효과가 존재하면 식품체인 전체를 볼 때 식품 감모나 쓰레기 절감의 사회적 후생증대 여부는 불명확할 수 있음. 식품 쓰레기를 성공적으로 절감한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질문함.

- 노르웨이: 식품체인 이해당사자간의 소통과 지식 공유(Knowledge Spillover) 중요
- 일본: 일본의 식품 폐기물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para 16 일본 관련 통계 수정 요구함
- 프랑스: para 39, 40, 41의 서술 교정 필요
- 스웨덴: 후속 작업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 EU: 가구 단위 자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식품제조 및 서비스(유통, 외식 등) 부문의 농산물 쓰레기 관련 자료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관련 조직이나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임
- FAO: 최근 진행된 연구결과 소개(식품 쓰레기의 농업과 환경 및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 식량안보와도 관련된 이슈)
- 아르헨: 교역(거래) 단계별 식품 쓰레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며 식품 쓰레기는 SPS 등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민간 기준(private standard)이 중요. 후속 작업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함

- 사무국은 차후 <표 5>에 각국의 의견제시를 요청함. 많은 자료는 Eurostat에서 제공받음. 현재 관련 주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 과제는 여기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공개 희망. 후속연구는 2015-16 PWB에서 논의될 예정임.
 - 회원국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공표하기로 결정(해당 데이터베이스도 각국이 검토한 다음 공개)

<식품공급체인에서의 경쟁 이슈에 관한 워크숍>

- OECD 경쟁분과(Competition Division)와 식품체인분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3년 10월 30~31일 개최
- 모든 단계의 식품체인 참여자들이 관심을 표명. 식품 소매단계에서 고품질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급업체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식품체인에서 가격 형성이나 계약 관련 자료 구축이 어려움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식품체인에서의 가격 형성과 전이, 식품체인 관련 정책이나 규제의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내년 5월 APM에서 해당 주제로 연구설계서를 제출할 예정

7.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의 시장 및 무역효과

- 사무국은 Aglink-Cosimo 모형에 농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식품체인단계별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량 자료를 적용하여,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세계가격, 시장,

그리고 무역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연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

- 수요와 공급이론을 적용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식품감모 감소와 수요 측면에서의 식품 쓰레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설명 가능
- 작업 계획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이용하고자 하는 FAO의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량 특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둘째,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량을 이용하여 지역 또는 국제적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관한 시나리오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수확량 격차 감소와 더 건강한 식단으로 변화 등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계획

○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 네덜란드: Aglink-Cosimo 모형과 같은 일반균형적 방법론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구단위 음식쓰레기와 요식업 단계의 쓰레기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Aglink-Cosimo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과일, 채소) 모듈을 개발할 필요있음.
- 영국: 사례 연구 참여. 국내 모형 전문가(부분균형모형을 일반균형모형으로 전환) 협조 가능함.
- 스위스: 다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고려해야 함(식품 쓰레기는 사 료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식품 쓰레기 절감 정책은 품목(상품) 특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품목 특정한 분석결과는 정책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 있음
- 독일: 수요와 공급 곡선의 수평 이동(식품감모가 없었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양을 공급. 식품감모가 없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을 수요)은 너무 지나친 가정이며 식품 쓰레기 절감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부적절함.
- 한국: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이용하는 관련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Aglink-Cosimo 모형에 포함된 각국의 식품체인 단계별, 품목별 FAO의 식품 감모 및 폐기량 추정치를 확인하고 수정·보완해야 함. 식품체 인단계별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축 효과 계측뿐만 아니라, 식품소비 주체별(식품제조업, 외식업, 소비자가구 등)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임
- 일본: 사례국가로서 협조 용의
- 프랑스: 매우 유용한 연구이나 일반균형적 방법론에 대해 의문이며 식품 쓰레기를 절감 하면 식품 수요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정하면, 쓰레기 절감이 사회적 후생감소 를 초래한다는 오류에 직면할 수 있음. 단순한 수요곡선의 이동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사례조사 참여를 환영
- 미국: FAO 등 많은 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단, FAO 추정치 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민감도 분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 ERS의 소매단계 식품 감모 추정 연구결과를 제공 용의. 현실과 비교하여 모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좋은 출발로 평가

- 아르헨: Aglink-Cosimo 좋은 분석수단이지만, 식품 가공단계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사례조사를 검토하여 Aglink-Cosimo 모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국경조치로 식품 감모 및 쓰레기 절감효과 제한될 우려 있음
- EU: Aglink-Cosimo 모형이 이런 목적으로 고안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충분히 적용가능한 정량적인 분석수단으로 판단. 좋은 출발로 평가하며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선·보강될 것으로 기대
- 뉴질랜드: 국가별로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서 식품 쓰레기 절감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이는 절감된 식품 쓰레기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임

○ 사무국은 Aglink-Cosimo 모형의 제약(상품 커버리지)과 장점(상품과 지역을 통합 또는 분할 용이, 시장과 무역에 대한 영향 파악)을 감안해서 분석수단으로 선택했지만 다른 방법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설명(전문가 자문 의뢰). 식품 감모나 쓰레기 절감을 가격과 수량을 통해 산출이 가능하며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 예정(FAO 추정치에 대한 검토 포함)이며 식품 감모나 쓰레기 절감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파급경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겠음. 이 연구는 indicative work이지 장기 프로젝트는 아님. 내년 5월 APM에서 경과보고서를, 11월 APM에서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

8. 2014년 농정평가보고서 제안

- OECD는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 변화와 농업에 대한 보조 수준을 M&E 보고서를 통해 발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권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2년마다 발간토록 하고 있음. 2014년은 회원국만을 대상 보고서가 작성될 차례임
- 연례보고서인 관계로 M&E 보고서의 구성은 매년 유사하지만, 내년 보고서의 분량은 축소할 예정임. 1장은 전체 회원국들의 농업정책과 지지 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20page 내외), 2장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임(국가당 2page)
- 농업에 대한 지지 수준 추정치 등의 통계는 기존과 달리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임
- 또한, 2014년 M&E 보고서에는 그 동안의 작업결과와 9월 전문가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된 일반서비스보조추정치(GSSE)가 제시될 예정임
- 장기적으로 사무국은 기존의 M&E 보고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함. 첫 번째 부분은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국에 관한 PSE/CSE/GSSE 정보와 통계, 이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정책 평가에 초점을 둔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임. 단, 회원국과 신흥경제국을 모두 포함한 주 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발간함. 두 번째 부분은 개별 국가에 관한 보고서와 특정 주제나 쟁점 정책에 초점을

문 보고서임.

- 이는 갈수록 신흥경제국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개별국가에 관한 정책평가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취지임
- 회원국들은 멕시코를 제외하고 통계부분의 온라인 공개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영국: M&E 보고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부분을 20page 내외로 줄이는 것은 찬성. 국가별 챕터에서 EU를 좀 더 분할하여 작성되기를 희망하며 M&E 보고서의 요약 부분에 대한 공표 여부를 농업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독일: 보고서 간소화 취지를 이해하나 신흥경제국과의 균형이 중요하며 통계는 1년 단위로 게시하되 국가별 농정은 2년 단위로 기술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의 정책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게 됨.
 - 캐나다: 국별 농정평가를 2페이지로 줄이면 정책 관련 정보 손실이 우려되며, 더욱이 2년에 한 번씩 개별 국가의 농정평가를 할 경우에도 역시 정책변화 파악이 어려워짐. 한편 GSSE가 바뀌면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EU: EU 국가를 분할하여 국별 정책평가를 기술하는 문제는 PSE, GSSE 자료의 가용성(availability)과 소유권(ownership) 등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PSE, GSSE 자료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요청하여 의견을 취합할 필요
 - 프랑스: 설문지 확대 배포는 좋은 아이디어임. M&E 보고서에 제시되는 정성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며 제안된 변화는 단순한 보고서의 구성 변화를 넘어 방향을 변경할 수 있음. EU 분할은 EU 차원의 결정 필요
 - 미국: 내년 GSSE 포함 시 개편 필요성 언급되어야 함. 매년 전망과 M&E는 농업위의 핵심 보고서이므로 격년제 발간시 정보 누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챕터 2페이지는 너무 작음. M&E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농업위에서 승인할 이유 없음
 - 노르웨이: M&E에 적은 노력을 들여 다른 주제를 더 연구할 수 있음
 - 호주: PSE, GSSE 등의 통계도 정책변화와 연계되어서 파악되기 때문에 국별 챕터 분량 축소하는 것에 우려 표명. EU 분할에는 찬성
- 사무국: M&E 3 요소는 통계, 전반적인 농정평가, 국가별 정책평가임. 신흥경제국 통계를 매년 수록하되 다만 국가별 정책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작성하자는 제안임 (국가별 정책평가는 별도의 브로셔로 발간할 수 있음). 2014년은 OECD 회원국만 수록되며 국가별 챕터에 융통성이 가능함.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도 설문지 발송(온라인)하여 의견 취합 후 설문결과는 내년 3월 APM에서 제출할 계획 (delegation corner). EU 분할은 좋은 의견이지만 통계 문제는 더 검토해 봐야

함.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등 6개국이 국별 첩터를 2페이지로 줄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2014년 M&E 보고서는 현행대로 추진. EU 분할과 장기적인 M&E 보고서 개편방안은 농업위의 2015~16 PWB 논의에서 다루기로 함

9. GSSE 개편

- 사무국은 GSSE가 최근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의 정확한 분류 및 추정이 회원국 농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OECD는 GSSE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2월의 APM회의에서 GSSE의 개념과 GSSE로 분류될 정책에 대한 제안서가 1차 논의되었으며, 2012년 5월과 11월의 회의에서 GSSE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11월 회의에서는 새롭게 제안된 GSSE 분류방식을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보도록 하였고, 그 결과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에스토니아를 대상으로 GSSE 분류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어 검토하였음
 - 2013년 5월 APM 회의에서는 이러한 국별 테스트 결과를 갖고 토의하였으며, GSSE 전문가 회의를 별도로 갖도록 결론이 났음. 9월 26-27일에 사무국이 제안한 3가지 기술적인 사항(제안된 개념, 토론을 위한 이슈, 문제와 제안)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 회의결과를 요약한 것임
 - 사무국은 개편된 GSSE의 실행(2014년 M&E 보고서부터 적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항목 라벨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라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라벨 숫자는 제한될 필요 동의). 사무국은 회원국이 개편된 GSSE의 정의에 동의하는지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
- 일부 회원국들은(프랑스, 일본, 멕시코 등) 신규 GSSE 관련 아직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적용가능성(feasibility)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을 1년 연기하자는 의견을 피력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영국, 캐나다, 미국 등) 2014년 M&E 보고서부터 신규 GSSE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함.
- 사무국은 관련 논의가 지난 3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으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에 많은 회원국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실험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함. 단, 과거 통계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기 또는 프락시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새로운 GSSE 적용시 전환기라는 것을 명기하기로 하고 내년 5월 APM에서 실행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1년 후에 평가 목적으로 전문가 회의 개최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10. 식품체인정책영향분석

- 사무국은 61차 APM에서는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와 독일 Thunen 연구소의 바이오연료, 비료 정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중간결과를 논의(Discussion) 목적으로 제출하였음을 설명함
 - 농산물공급체인에서의 산업들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대한 관심은 농산물의 수요, 공급, 무역, 가격, 농민과 농가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증가함. 2025년까지 시뮬레이션 결과 바이오연료와 비료에 대한 지원정책은 농업 생산, 가격,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바이오연료와 비료에 대한 지원정책의 총 효과로 밀, 곡물, 오일채취 종자, 당채취용 곡물의 가격이 2~6% 정도 오르게 됨. 시장과 소득에 미치는 정책 효과는 지원이 제공되는 시장여건에 크게 좌우됨. 에너지가격이 낮을수록 바이오연료와 비료 지원정책이 시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커짐.
- 회원국들은 농업의 전후방산업인 비료와 바이오연료 산업에 대한 정책효과를 정량 분석하는 본 연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 분석모형 관련 제약점이나 기술적인 내용을 부록에 명시하고 분석대상에 2세대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기를 요청
 - 일본: 비료 수출국과 수입국이 균형되게 포함되어야 하며, 수출제한 문제 고려해야 함, 2세대 바이오연료 포함
 - 아르헨: 바이오연료의 경우 에너지가격과의 관계가 단순하게 일반화되는 결론 도출은 곤란함(환경 등 다른분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침)
 - 뉴질랜드: 2025년의 장기적 효과 외에도 단기적 파급영향을 계측하는 것도 중요
- 사무국은 2세대 바이오연료를 포함여부와 비료 관련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두 섹터에 대한 지지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설명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시하여 공개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11. 농업투자 : 민관 파트너쉽

- 사무국은 이 보고서는 민관협력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에 대한 OECD의 연구결과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정의, 분류체계, 쟁점들과

지도지침에 대한 것들로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져 제시함.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 일반 연구자(Hall 등), 표준무역개발시설(STDF), 미주개발은행(IDB) 등에서도 PPP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해왔음. 특히 농업혁신을 위한 PPP는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자원과 위험을 공유하고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계(mechanism)로 농업분야는 축산, 임업, 수산업분야를 포함하고, 공적기관은 연구기관, 대학, 농업연장교육기관을 포함하고 민간기관은 생산자 연합, 비즈니스 업체들 및 개인 생산자들을 포괄함”

- 1)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해 그동안 OECD 및 관련 기관들의 작업들에 대한 개관(review), 2) PPP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정의와 분류체계(typologies), 3) 다양한 파트너쉽과 그들의 목적, PPP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들의 참여이유(rationale), 예상되는 혜택과 어려움들, 4) 성공적인 PPP를 위한 지침들(guidelines)과 좋은 실행방안(good practices) 등에 대해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findings), 5) 일반적인 PPP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농업혁신을 위한 PPP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함.

○ 캐나다, 호주, 브라질은 사례국가로써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농업분야의 특징적인 PPP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대함.

- 캐나다: 생산자의 리더쉽이 중요함
- BIAC: 실패 사례도 중요함, 빌게이츠 재단 참여
- 스위스: 식량안보에 지속가능한 축산업도 포함되어야 함, 네슬레 사례
- FAO: 현재 15개 개도국 사례 연구가 중요
- 호주: 농업에 대한 공적 연구지출이 중요함
- EC: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필요
- 프랑스: PPP는 효율적인 장점이 있지만 실행에서는 단점을 보이며 농민이 소외되기 쉬우므로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
- 미국: PPP는 국제식량안보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단, 종자산업에서 PPP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농업 전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참여 회사의 규모, 국적 등 여건이 다른 PPP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함.

○ 사무국은 12월 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라며 식품체인네트워크에서 농업혁신을 위한 PPP에 대한 심포지엄을 2014년 6월 16-17일 개최할 예정이므로 가능한한 회원국들의 사례를 제공해주거나 전문가들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함.

12. 정책일관성과 세계식량안보

<농업발전환경>

- 사무국은 이 연구가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농업부문 경쟁력을 제고하는 여건(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임을 설명하고 지난 5월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일본, 프랑스, 스페인, EU 등)들이 상위연구인 “정책일관성과 세계식량안보”와의 낮은 연관성, 분석방법 및 범위 설정(지표 구분 등)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것을 반영하였음을 설명함.
- 이 연구의 3가지 목적은 1) 경제의 성장과 발전, 농업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과 이러한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를 찾아내고 2)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위한 발전환경의 구성요소들을 밝혀내는 유형을 제시하며, 이러한 유형들에 포함시킬 지표들이 국가별로 어떻게 평가되고 사용가능한지 제시할 것이며 3) 농업 성장과 개발을 위한 발전환경과 관련된 예시적이고 초안적인 지표들을 구성해보고, 이러한 지표들이 과연 가능하고 잠재적인 효용성이 있는지 실험적으로 일부 개도국에 적용해 보는 것임을 설명함
-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에 특화된 농업성장을 위한 발전지표(AEGI)가 일부 제약점은 있으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미국: 농업분야 총지출이나 자연자원이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로 적합한지 의문.
- EU: 지표의 요소가 지금까지의 정책목표였던 식량안보, 농업생산성 증대 등에 치우쳐있어 향후 정책방향인 녹색성장전략, 건강, 지역개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음.
- 독일: 지표 내부의 세부요소들의 비중이 균등한 것이 적합한지 질문.
- 프랑스, 스웨덴 영국: 최종적으로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은 개도국에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 회원국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단순히 순위를 제시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질문.
- 에스토니아: 개도국에게 장기적인 농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
- 사무국은 12월 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를 요청하며 이 지표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관한 사안은 다음 3월 APM에서 논의하고 2015-16 PWB 논의 시 이를 반영.

<식량안보와 무역>

- 사무국은 식량안보와 무역과의 연계를 분석하기 위해 메튜교수에게 의뢰한 개도국의 유형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무역정책이 식량안보의 4가지 요소(가용성, 접근성, 유용성,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종합보고서를 만들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 회원국들은 연구주제가 상당히 유용하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국가 선정이 중요하며, 또한 국가별 유형화작업이 완료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함. 사무국은 아직 유형화 작업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로 대조되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상이한 무역정책이 식량안보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하였음.
- EU: 개도국 국가 유형화는 개발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가급적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함.
- 독일: 식량안보의 달성수단의 하나가 재고인데, 재고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을 지적함.
- 캐나다: 정책권고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제시되어야 하며, 무역으로 인한 가격전 이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국: ERS에서 유사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무역의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을 여기 연구에서처럼 식량가용성의 차원에서만 볼게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강조함
- 우리나라는 현재는 무역의 역할이 식량수입을 위한 충분한 외화획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국처럼 75%이상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무역의 안정성이 식량안보와 더 관련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파라 11에 스웨덴의 선행연구를 소개하면서 잘사는 개도국은 WTO에서 선진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서술은 식량안보와 무역이라는 연구목적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함.

<일시적 식량불안(i. 인도네시아 사례, ii. 분석을 위한 framework)>

- 사무국은 일시적인 이유(재해, 질병, 가격폭등 등)로 인한 식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이 취하는 정책이 편익/비용이 낮거나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일본과 네덜란드의 자금 지원하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하여 사례연구를 진행 중임을 설명함.
- 많은 국가들이 일시적 식량불안을 위험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지하고,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인도네시아 외에도 다른 나라에 대해 사례연구를 하길 희망하였음. 사무국은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 3월 APM에서 framework에 대해, 5월 APM에서 인도네시아 사례에 대한 1차 연구결과를 논의할 계획임을 설명
- 일본: APEC 회의에서의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며, 이번 PWB기간중에 다른

나라가 더 추가되어 분석되기를 희망하고 다음 PWB에서도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희망함.

- EU: 위험관리차원의 접근에 동조하고, 개인이 식량안보적인지, 불안한지를 결정하는 기준(threshold)은 매우 민감하다고 언급함.
- 프랑스: 인도네시아사례의 시나리오분석과 framework에서의 포트폴리오 접근과의 연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두가지 연구의 선후관계를 문의함
- 스위스: 식량안보에는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가의 중요도, 남녀 차별, 사회적 형평도 등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피력함.
- 아르헨티나: 식량안보에는 선진국의 보조금정책은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식량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피력함.

○ 사무국은 12월 6일까지 서면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임을 설명함

13. 중국의 농업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워크숍

- 사무국은 지난 10월 24일 북경에서 OECD와 중국 농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이 성황리에 끝났음을 보고하고, 중국이 세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OECD 회의에 중국이 더 자주 참여하길 희망하며, 관련 자료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고 보고함. 특히 최근 중국에서도 최저가격의 인상여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함.

14. 세계 농업포럼, 농업위원회와 산하기관의 위임사항 연장 관련

- 사무국은 12월 16일에 농업에 관한 글로벌포럼이 농업위원회 직전에 개최되며, 주제는 “정책환경의 측정” 이라고 설명하고 주제발표국 이외에도 기타 회원국들도 PSE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함.
- 농업위원회와 산하기관의 위임사항(mandate)이 2015년 7월까지 연장되어 내년 초부터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심층평가가 진행되고 작업반에서도 계속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보고함

15. 2014년의 의장단 선출

- 회원국들은 2014년 1년간 활동할 APM의장단으로 현재의 의장단을 재선임 함.
- 의장: Adam Bell(영국)
- 부의장: Vanina Forget(프랑스), Nils Bergset(노르웨이), Steve Neff(미국)

I. 회의명 : 제70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3.11.22일, 파리 OECD 본부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온누리 사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V. 핵심요지 :

- ‘농업부가가치 DB의 범위’ 연구는
- ‘지역무역협정과 농업’ 공개결정 논의에서 일부 회원국들(프랑스, 스위스, EU, 한국, 일본 등)이 공개결정을 반대하여 향후 5월에 수정된 보고서에 대한 공개결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결정됨
- ‘민간표준과 공공규제의 시너지’에 관한 보고서의 연구 경과를 설명하였고, 프랑스, 한국의 유기농 관련 사례분석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스위스, 네덜란드의 사례연구를 추가로 분석하여 내년 5월 JWPAT에서 최종보고서를 제안할 예정임.

VI. 상세내용 :

1.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 사무국은 일반 상품분야의 무역원활화 지표가 농산물 교역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여 농산물 교역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연구설계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의 검토의견과 농산물 통관 및 검역 관련 (협조가 가능한)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함
- 회원국은 무역원활화 분야의 진전을 목표로 다음 달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감안하면 농업분야 특징적인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이 매우 유용한 작업임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캐나다: 개도국과 선진국 무역원활화 수준에 대한 비교
 - 일본: SPS와 연계된 물류 여건, 열대 지역 냉동 시설 등 개도국 무역원활화 장애

요인에 대한 고려 필요하며, 사례조사가 유용할 수 있음

- EU: 민간 농산물교역 회사와의 연계 필요
 - 호주: 글로벌가치사슬 지표와의 연계 가능성
 - 스페인: 개발된 지표를 모든 국가에 적용
- 사무국은 개발하고자 하는 무역원활화 지표는 정성적인 평가가 목적이 아니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역 및 통관 과정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문서가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고안될 것임을 설명. 본 작업의 목적은 개도국의 농산물 무역 장애요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임. 개도국 중심으로 개도국의 농산물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2. 농식품 부가가치 DB의 범위

- 사무국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상품의 설계, 제조, 중간재 조달, 완제품 수출 및 유통 등의 기능이 별도로 진행되는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전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사슬의 이해를 위해 수출입 자료가 아닌 부가가치 중심의 D/B 필요성이 제기되어 OECD와 WTO는 부가가치 중심의 D/B(TiVa : Trade in Value-Added)를 구축함을 설명.
- D/B 구축은 농식품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3년 6월 농업위에서 제기되어 농식품 분야의 부가가치 D/B 구축 추진되었으며 이미 구축 중인 TiVA(Trade in Value-Added)에 일부 품목을 더 세분화하여 농식품 분야 D/B 구축함.
- 회원국은 그동안 글로벌가치사슬에서 농산물교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의적절하게 추진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 캐나다: 농식품 다국적기업은 최적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사슬지표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일본: OECD가 본 작업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
 - 프랑스: GTAP DB를 활용한 지표개발에 앞서 농식품분야 GVC에 대한 미시경제적인 사례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지표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가정들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야 지표의 편의를 줄일 수 있음.
 - 영국: 다국적기업의 교역형태(interfirm, intrafirm)에 대한 고려 필요.
 - EU: 해당 지표를 통해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 뉴질랜드: GVC는 각국의 무역정책과 해외직접투자 흐름과 연계되어있음.

- 미국: 농식품분야에는 다양한 형태의 GVC가 존재. GVC의 길이, 품목, 지역별로 구분하여 사례연구가 필요
- 사무국은 GTAP DB에는 농업관련 서비스(가공, 유통 등)산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가치사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특정국가가 GVC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파악하고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심사항임(15-16 PWB). GVC에서의 농식품 다국적 기업에 관한 사례연구가 향후 추진될 수 있음.

3. 지역무역협정과 농업

- 사무국은 농업무역 분야에 지역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진 농업부문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시사점)와 지역무역협정이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연구된 보고서를 토대로 통계 등 기초 정보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 제안이 추가됨을 설명함.
- 69차 JWPAT에 제출되었으며,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취합한 최종보고서가 이번 회의에서 공개 승인을 목적으로 제출함.
- 55개 지역무역협정 및 158개의 관세양허안을 분석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농업관련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WTO에서 이룩한 무역자유화 수준에 비해 더 진전되었는지 검토하였고 전체 RT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관세라인의 증가와 관세감축은 품목별, 국가별 양허제외에도 불구하고, 관세감축이라는 시장접근 측면에서 WTO 농업협정보다 무역자유화가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함.
-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적용될 양허방식과 제반규정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
-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프랑스, EU, 일본, 스위스, 포르투갈)은 본 보고서의 정책 권고가 지난 2년간의 작업결과를 균형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장접근과 비관세조치 완화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함. 반면 농산물 수출국들(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은 그동안 공표된 세 가지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수준이고 보편적인 정책권고가 기술된 점들 들어 본 보고서의 공개결정을 지지함
- 프랑스: 세 가지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했지만, 주요 실증분석 결과와 근거 등이 생략된 채 결과만 제시함으로써 종합보고서의 품질이 오히려 저하됨. 보고서의 공표를 반대함. 특히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권고는 그 동안의 세 가지 연구작업 결과에 비해 편익된 측면이 있음. RTA 체결과 농업분야 양허방식의 정치경제적 배경 및 의의, 국내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나 국내농정 관련 정책권

고 등이 누락되어 있음

- EU: 지난 3년 동안 추진된 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권고라고 보기 어려움. RTA에서 농업 분야의 관세철폐율이 낮은 것은 정치경제학적 차원의 협상결과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음(단순히 개방수준의 고저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
 - 일본: 원산지 단일규정으로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적인 권고. 수입관세인하와 동일한 잣대로 수출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되어야 함. 전반적으로 수출국 위주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정책권고가 이뤄짐
 - 한국: FTA와 같은 RTA에서는 관련 당사국들이 교역확대와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농업 상황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양허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정체결에 도움이 됨. SPS 조치가 식품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농식품 무역증대를 유인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이 존재하는 데 반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일률적인 관세인하와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권고는 균형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없음. 수입국의 견해를 반영한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고서가 기술되어야 함(보고서의 수정을 요구)
- 사무국은 수입국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내년 5월 JWPAT 회의에서 다시 제출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4. 민간표준과 공공규제의 시너지

- 사무국은 민간 기준 관련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농업분야의 환경 관련 민간 기준들을 소개함.
- (사례조사)프랑스는 유기농업 기준, 농가 환경 인증,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위한 자발적 계획 등 3가지 항목과 한국은 유기농업 기준만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 네덜란드와 스위스에 대한 사례조사는 11~12월에 진행되며 유기농업 기준으로 범위를 제한한 OECD 회원국 분석은 설문지를 토대로 한 면접(정부 및 유관기관) 방식으로 내년 1~2월에 수행될 예정임.
 - 내년 5월 JWPAT에 제시될 최종보고서 초안은 1장 개념정립 틀, 2장 사례연구 종합, 3장 OECD 회원국 분석, 4장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성됨을 소개.
- 회원국은 지난 연구설계서 논의 시 요청되었던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조사대상 농업-환경 민간기준 검토, 사례조사 계획수립 등이 대체로 잘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완 사항을 요청함
- 프랑스: 설문지가 너무 길고 서로 다른 민간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각각의 기준별로 보다 정치하게 작성해서 해당 기준 담당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유기농 기준은 농업-환경과 무관하게 식품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발전되어 왔음. 따라서 유기농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을 사례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민간과 공공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민간 기준을 설정한 비공공기관(회사, 생산자단체, NGO 등)에 대한 조사가 보강될 필요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농업-환경 기준은 의무적인 경우가 많음. 민간이 설정한 기준도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다음에는 의무적인 기준과 유사하게 기능을 하게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뉴질랜드: SPS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고찰이 필요. 개도국에서는 일부 민간 기준을 설정한 조직체의 구성 및 운영 투명성이 낮아 많은 문제점들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함
- 미국: 미국의 유기농 등 식품안전성 관련 다양한 기준들이 소비자 지향적이며 가격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보다 농업-환경과 관련된 민간 기준에 대한 조사가 추가될 필요. 민간기준 관련 소매업체나 다국적회사 등 여러 형태의 공급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이 보강되어야 하며, 이 분야 민간 회사에 대한 사례조사 또는 위탁 컨설팅연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무국은 유기농 기준 외에도 다양한 농업-환경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예정이며, 생산 및 유통 등 공급 측면에서 민간기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사를 보강할 계획임을 설명함. 본 연구작업은 4개국 민간기준에 대한 사례조사, 민간기준 및 공공기준 관련 담당자 설문 및 면담조사로 이루어질 것이며, 설문지는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민간기준 설정과 운영에서의 연계 부분에 중점을 두어 재구성될 것임. 내년 5월 JWPAT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제출될 것임

5. 2014년 의장단 선임

- 2014년 의장으로 멕시코 Jorge Lueda가 재선임되었으며 부의장으로 스웨덴 Katarina Johansson, 호주 Matthew Worrell이 선임됨